

의료 현장에 군의관 투입... 교수 집단행동 '이번주 분수령'

전공의 공백 4주차

복지부, 군의관 등 170명 내일 근무 공백 막기 위해 순환배치 200명 계획

병원 3곳 교수들 긴급총회

단체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동 논의 시국선언 발표 후 연대서명 본격화

전공의 공백이 4주차에 접어들며 정부가 군의관과 공보의를 의료현장에 투입했다. 미복귀 전공의에겐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지만 행정처분 전까지 돌아오면 정상 참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대 교수들은 아직 집단행동을 결의하지 않았지만 반발의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 향후 변수로 주목된다.

◆군의관·공보의 투입 시작

11일 보건복지부는 군의관 20명과 공보의 150명을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20개 의료기관에 파견했다. 투입 인력 중 138명이 일반이다. 이들은 파견된 기관에서 교육 등을 받고 오는 13일부터 근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향후 현장 상황에 따른 추가 인력 투입도 추진된다. 파견에 따른 인력 공백



정부가 11일 전공의 의료 공백에 대응해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조사 138명을 20개 병원에 파견했다. 이날 서울시내 한 병원에서 한 군의관이 파견근무에 나서고 있다. /뉴스시스

을 막기 위해 순환 배치 또는 약 200명의 공보의 추가 배치도 계획 중이다. 전체 공보의는 1400명 규모다.

이날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자는 92.9%인 1만1994명이었다. 복지부는 현장점검 실시 결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 이탈자를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지난 8일 기준 총

4944명에게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하지만 정부는 행정처분 전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정상 참작을 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행정처분을 할 때 행정처분 예고 전이나 진행 중에 복귀하게 되면 정상 참작이 가능하다"며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길을 좀 더 열어준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12일부터는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거나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도 운영된다.

전병왕 제1통제관은 "전공의가 요청하는 경우 다른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후 불이익 여부도 모니터링 해 끝까지 보호하겠다"며 "정부는 집단행동을 조장하고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압력을 넣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확인 되는대로 신속히 수사 의뢰를 하고 있으며, 형사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수 집단행동 이번주 분수령

제자들을 지키기 위한 의대 교수들의 반발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에서 각 병원 소속 교수들이 모인 가운데 긴급총회를 열었다. 비대위는 이 자리에서 대학의 의대 증원 신청과 전공의 사직 등 현 상황과 그간의 비대위 활동을 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단체 사직서 제출 등 집단 행동이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분당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는 자

체 설문조사를 통해 설문자의 85%가 "전공의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전국외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오는 14일 회의를 열어 의대생들의 집단휴학과 전공의 미복귀 사태 등에 대해 논의한다. 전의교협 역시 집단사직을 고려하진 않지만 개별 사직은 이어질 것으로 우려한 바 있다. 오는 14일부터 의대생들의 유급과 휴학이 결정되는 만큼, 그 결과에 따라 교수들의 개별 사직이 이어지거나 일부 집단행동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시국선언문 발표와 함께 시작된 동료 교수들의 연대서명도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여의도성모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세브란스병원 ▲이대서울병원 ▲분당차병원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고대안양병원 소속 의료진들은 '의료 붕괴를 경고하는 시국선언'이라는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하고 연대서명을 받고 있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총 6482명이 시국선언문에 동의해 연대서명했다.

/이세경 기자 seille@metroseoul.co.kr

'집단유급' 우려... 교육장관, 의대생에 대화 제의

이르면 14일 '집단유급' 나올수도 의대협서 13일까지 대화에 응하면 학사운영 정상화·학습권보호 등 논의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의 '집단유급' 사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국 의대 학생단체 대표에게 대화를 제의했다.

수업 일수를 채우려면 아무리 늦어도 4월 안에는 개강해야 대규모 유급 사태를 피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연일 대치를 이어가는 정부와 의대생들이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각 의대 학생 대표로 구성된 대한외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

협) 대표에게 연락해 대화를 제안했다. 의대협 측은 13일 오후 6시까지 대화에 응하겠다고 답신하면, 의대 학사운영 정상화 및 학생 학습권 보호에 대해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달 20일의대생 집단행동이 본격화한 이래 이 부총리는 의대생들과 직접 만난 적은 없다. 다만, 전국 40개의대 운영 대학의 총장과 교무처장을 여러차례 소집해 동맹휴학을 허가하지 말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의대생 장기 결석이 이어지면서 무더기로 유급 처리될 경우 내년 수업 수업은 물론, 향후 의사 수급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대화를 시도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각 대학은 1학

기 수업 일수를 최소 15주 확보해야 한다. 대학별로 구체적 학칙은 다르지만, 의대는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한 학생에게 F 학점을 부여하고 유급 처리한다.

일부 대학에서는 빠르면 오는 14일을 기점으로 집단 유급되는 의대생들이 나올 수 있다. 앞서 2월부터 수업을 진행한 한림대 의대의 경우 결석 일수가 한계에 도달해 지난주 의학과 1학년 학생 중 수업 출석 일수가 미달한 학생들에게 유급 예고 문자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개강하지 않은 의대의 경우, 방학 없이 8월 말까지 1학기 수업이 이어가면 4월 말 개강해도 수업 시수는 채울 수 있지만, 대부분 교수가 진료와 강의를 병행하는 의대 특성상 위험 부담

이 있다.

교수들도 본격적인 대응 방안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전국외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오는 14일 회의를 열어 의대생들의 집단휴학과 전공의 미복귀 사태 등에 대해 논의한다. 전의교협은 이달 안에 의대생 휴학 사태를 해결해야만 학생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10일까지 누적된 휴학 신청은 총 5445명으로 나타났다. 유급 휴학 신청은 8일과 9일 8개교에서 10명으로, 지금까지 의대생 1만8793명 중 누적인원 5446명이다. 의대 총인원의 29% 수준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



'전공의 집단행동'에 이어 의과대학 학생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에 들어간 5일 경기도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텅 비어 있다. /뉴스시스

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해서 협조요청할 계획"이라며 "이번 (의대 학생단체 대표) 만남은 지금 오랫동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대학의 수업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학사 운영과 관련한 부분을 풀어나가고자 하는 의지로 제안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ihj@

산업부-배터리 3사 '꿈의 배터리' 개발 힘 모은다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5년간 1172억 올해 기업서 설비 등에 9조 이상 투입

정부와 배터리3사(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가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와 LFP 등 보급형 배터리 개발에 힘을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배터리 3사가 참여하는 '친환경 모빌리티용 고성능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사업'에 2028년까지 총 1172억원을 투입해 전고체, 리튬메탈, 리튬황 등 3가지의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다.

차세대 배터리란 기존 소재와는 다른

물질을 사용해 배터리 성능·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이차전지를 말한다. 현재 상용 배터리가 기술적인 한계에 도달해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다.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는 고체 전해질을 이용해 화재 발생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줄여 전기차를 비롯해 많은 분야에 활용 가능성이 높다.

리튬메탈 배터리는 음극소재에 흑연 대신 리튬메탈을 사용해 에너지밀도와 수명 개선이 기대되며, 특히 흑연을 사용하지 않아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리튬황 배터리는 양극소재에 리튬이

아닌 황을 사용해 기존 배터리보다 가벼워, UAM 등 기체의 무게가 중요한 도심항공용으로 적합하다.

국내에서는 배터리 3사를 중심으로 개별 기업 단위에서 개발이 진행중이나, 이번 기술개발 과제를 통해 국내 부품·소재·장비·셀·완성차기업을 모두 포함한 차세대 배터리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용하는 소재·공법에 따라 다양한 조합이 가능해, 개별 기업이 모든 필요 기술을 개발하고 적정한 기술 포트폴리오를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며 "배터리 셀 기업뿐 아니라, 소부

LG 에너지솔루션

SK on

SAMSUNG 삼성SDI

장 기업들이 모두 참여하는 대형과제를 통해 시장 초기부터 관련 생태계를 폭넓게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내달 과제를 공고하고, 상반기 중 평가를 거쳐 하반기부터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최근 시장점유율을 넓히고 있는 LFP 등 보급형 배터리 개발에도 민·관이 힘을 모은다. LFP 배터리 점유율은 2020

년 16%에서 2023년 38%로 급증했고, 나트륨배터리도 보급형 시장에서 주목받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배터리3사와 예코프로·LNF이 LFP용 양극재 개발 등 LFP 제품 관련 투자를 진행 중이며, 산업부는 작년 LFP 배터리에 이어 올해 나트륨배터리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해 민간의 기술 확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배터리 관련 설비투자도 연구개발도 본격 추진된다. 기업들은 올해 총 9조 원 이상의 자금을 설비와 연구개발에 투자할 예정인데, 이 가운데 차세대 배터리 파일럿 라인, 4680 원통형 배터리 생산라인, LFP 양극재 생산라인, 흑연 가공 등 음극재 생산라인 등 설비 투자에 총 7조1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